

### ‘월급 못 줄 수 있다’ 자진사직 유도...“해고예고수당 쥐야”

이슈 판권



식당 주인이 명시적으로 ‘그만 두라’는 취지의 말을 안 했어도 직원들이 여쭙 수 없이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해 해고예고수당을 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식당종업원 이던 전모씨 등 2명이 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해고

예고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춘천지법 민사합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 원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6년 11월30일 전씨 등 종업원 4명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가 이튿날에도 비슷한 취지로 말하자 이들 4명은 식당을 그만뒀다.

이후 전씨 등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더니

한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200만원 안팎의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전씨 등이 식당을 그만둔 게 자발적 사직인지, 식당 주인에 의한 해고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김씨가 4명 전원을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중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해도 해고될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4명 중 누구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당시 식당 매출규모가 적지 않았고 점심 시간엔 통상 손님 수십명이 찾아 적어도 종업원 2~3명은 반드시 필요했고, 김씨가 명시적으로 ‘그

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4명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김씨의 일방적 의사로 사직의사가 없는 4명이 여쭙 수 없이 시작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식당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적어도 2~3명의 종업원이 필요했다면 4명 중 해고할 사람을 특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근로자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며 4명 모두의 자진사직을 유도했다”면서 “계속 일해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건 일방적으로 해고의 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 “맥 살아난 임경빈 군 존재, 해경청장 모르긴 어려웠을 것”

### 박병우 세월호진상규명국장 “왜 헬기이송 안 됐는지 밝혀져야”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인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스트타워 특조위 회의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앞서 단원고 2학년 임경빈군이 맥박이 뛰는 상태로 오후 5시24분에 발견됐고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3009함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오후 5시54분에는 의사가 “CPR 지속, 병원 이송”이라는 지시를 하지만 오후 6시30분에 (헬기가 아닌) P정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김 청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면 경빈군이 발견됐다는 상황을 알고도 헬기를 탄 의혹이 제기된다. 경빈군의 사망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함정에 있었다면 의무실로 한 번은 내려갔어야 하지 않았냐는 게 박 국장의 지적이다. 박 국장은 당시 임군을 헬기로 이송했다면 소생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당일 오후 6시30분쯤에는 서울에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기자 브리핑을 갖고 “사망은 조금 전에 한 명 더 늘어 3명”이라며 “신원이 확인은 안됐지만 남자로서 학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이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해경청장이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박병우 국장은 “환자를 헬기에 태우고 병원에 내려놔도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청장은 의무실로 단 한번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앞서 오후 5시44분에 3009함에서 헬기를 타고 떠난 서해지 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박 국

장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러 헬기를 탔는데 긴급하게 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에 의하면 서해청장은 오후 6시와 오후 6시10분에 서해청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정작 기자 브리핑은 오후 7시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서해청과 목포한국병원은 가까운 거리였다. 경빈군의 존재를 보고받았다면 서해청장 또한 한번이라도 의무실로 내려왔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0월31일 기자회견에서 ‘임군에 대한 사망판정이 오후 6시35분 전에 이뤄졌다면 생명구조 상황이 아니냐’는 반론에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따르면 업무구조사는 사망판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군은 오후 5시35분쯤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이송조치를 지시받은 상황이었다.

박 국장은 “국민들이 생명이 물속에서 위협받고 있고 젊은 학생이 구조돼 나왔다고 하는데 수사 자체도 되지 않았다”며 “진정사건을 맡은 검찰은 임군을 담당했던 응급구조사의 자필진술서 1개를 확인하고 사인을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응급환자가 배 안에 있다는) 상황을 전혀 몰랐고 며칠 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뉴스1

## 시민단체 “이정현, ‘장 지진다’ 약속 지키고 즉각 사퇴하라”

### “법원 2심 재판결과는 솜방망이 처벌” 주장



이정현 의원을 세월호 보도 개입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416연대, 전국 언론노동조합,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현 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전남 순천)을 세월호 보도 개입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416연대, 전국 언론노동조합,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이정현 의원은 ‘손에 장을 지진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즉각 사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이정현 의원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박근혜권 흥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박근혜의 심기 살피기와 언론탄압에 주력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촛불정국 시기에 탄핵안이 발의되면 장을 지진다”고 한 만큼 이 의원은 약속을 지키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빚어진 지 5년7개월이 지나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수사에 나서려 한다”며 “검찰은 언론을 탄압하고 진실을 가리려고 한 이정현을 반드시 포함시켜 구속시키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이후 이정현은 순천에서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며 “순천시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행보는 그만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 ‘타다’ 첫 재판 12월2일...불법·합법 공방 예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이 다음달 초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2월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

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앞선다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고 반박해왔다.

뉴스1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레치료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인원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h-well

국민건강보험